

# 건설동향브리핑

## 제411호 (2013. 5. 13)

---

### ■ 경제 동향

- 4.1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마감

### ■ 정책 · 경영

- 창조경제에 맞는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 정책 필요
- 새 정부, SOC 민간 자본 유치 통해 건설업 활로 열어줘야

### ■ 정보 마당

- 건설 보증 : 국민 경제 및 건설업 활성화에 기여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중소 건설업에 절실한 창조경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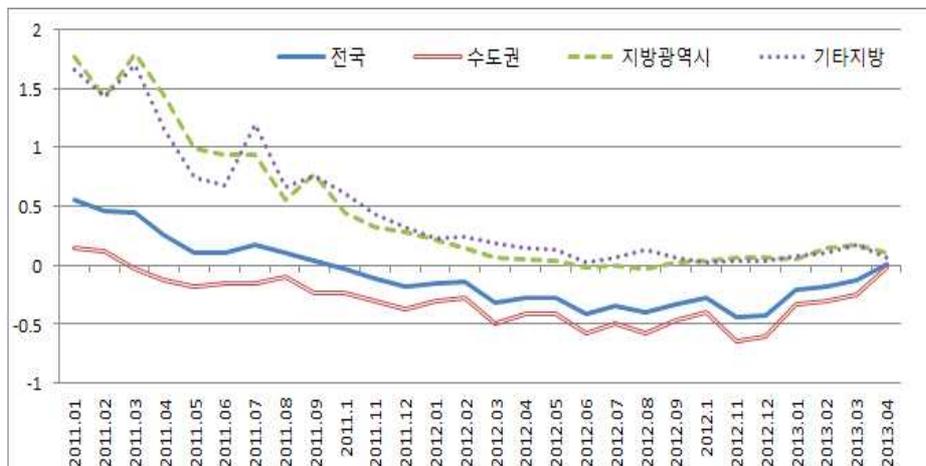
## 4.1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마감

- 4월 30일 입법화에 따라 중소형·재건축·신도시 중심으로 매매 가격 소폭 상승 -

### ■ 4.1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로 전환

-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세였으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수도권은 2011년 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4월 들어 하락폭이 큰 폭으로 둔화됨.
-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4월 들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3년 4월
전국	0.01
수도권	-0.02
지방광역시	0.11
기타 지방	0.07

자료 : 부동산114(주)

### ■ 중소형·재건축·신도시 중심으로 소폭 상승

- 4.1 대책 이후 수도권 일반 아파트는 하락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됨.
- 일반 아파트는 3월 -0.34%에서 4월 -0.07%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85㎡ 초과에서 큰 폭으로 둔화됨.
-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2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됨. 60~85㎡ 이하 규모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됨.

- 1기 신도시는 2011년 4월부터의 하락세가 4.1 대책 이후 85㎡ 이하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유형별·규모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

지역	유형	기간	전체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일반 아파트	2013. 3	-0.34	-0.16	-0.27	-0.52
		2013. 4	-0.07	-0.04	-0.06	-0.1
	재건축 아파트	2013. 3	0.74	1.81	1.07	0.02
		2013. 4	0.51	0.60	1.29	0.00
1기 신도시		2013. 3	-0.28	-0.09	-0.27	-0.37
		2013. 4	0.01	0.05	0.06	-0.02

주 :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며, 규모별 분류는 전용 면적 기준임.  
 자료 : 부동산114(주)

■ 4.1 대책 입법화로 매매 가격 회복 양상

- 4.1 대책에서 나왔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안이 4월 30일 일부 조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양도소득세 :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5년 간 면제(4월 30일 가결)
  - 취득세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4월 30일 가결)
- 4.1 대책 세제 관련 내용의 비교적 빠른 입법화로 정부의 주택 경기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었으며, 이제 소비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주택에 대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임차로 거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불편함 등과 자가로 거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로 주택 구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창조경제에 맞는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 정책 필요\*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의 역할과 경영 실태 및 지원 방향 -

### ■ 창조경제와 건설산업

- 정부는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추진
-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 전략의 모색이 창조경제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창의적이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창조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창조 산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의 역할

-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 능력이 우수하여 창조경제의 구현에 적합한 산업임.
  -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하여, 모듈 공법 등 생산 방식의 혁신, IT·GT 등의 융·복합 기술의 심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소 건설업체들에 의한 기술 혁신 활동이 기대 이상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유럽의 경우, 전체 기술 혁신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룸.
-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중소 건설업체는 경기 침체기에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고용 창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본 원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연구」(권오현·김영덕, 2013. 5. 10)'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002년까지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은 23.1만 명의 고용을 감축했으나, 중소 건설업은 이와는 반대로 12.5만 명의 고용을 확대

##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 실태

- 현재 중소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외환 위기 이후 2010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2%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연간 퇴출되는 업체가 22.1%에 이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
- 각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2011년 9.7조원 가운데 중소기업청 예산을 제외한 3.8조원 중 국토교통부 예산은 90억원으로 0.2%를 차지
  - 건설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 5.3%, 고용 비중 7.2%를 감안하면 건설업체 지원은 매우 인색한 수준
- 국토교통부 중소 건설업 지원 예산은 국토해양 R&D 투자의 1.5%에 불과하며, 국토해양 R&D 투자 중 중소기업 지원은 12.0%로 파악되나, 실질적인 지원과는 괴리가 있음.

##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 정책 방향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선이 요구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
- 중소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경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그리고, 건설업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을 돕는 ‘신사업 진출 지원’ 등이 필요함.
-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김영덕(연구위원-산업 · ydkim@cerik.re.kr)

## 새 정부, SOC 민간 자본 유치 통해 건설업 활로 열어줘야\*

- 새 정부 건설 정책,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융·복합을 통한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 강조 -

### ■ 2013년, 물량 감소·수익성 악화·단기 순차입금 증가로 자금 압박 심화 예상

- 공사 물량의 급감과 전 공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부진은 건설업체들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켜 인력 구조조정과 부실화를 초래
  - 기술형 대형 공사의 감소, 주택 가격의 하락 및 미분양 증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제도의 존치 등에 따라 2008년 대비 2012년 9월 토목의 영업 이익률은 6.4%→2.6%, 건축은 7.2%→2.0%로 하락. 이에 따라 2012년 건설업의 수익성은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11.9% 기록\*\*
  - 이러한 물량 감소와 수익성 하락은 매출액, 선급금 및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부진을 초래. 2012년 건설업 영업 활동 현금 유입은 업체당 평균 -71억원을 기록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감소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상당 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주요 30개 사의 단기 상환 PF의 비중은 전체 PF의 68.8%(13.9조원)로 오히려 증가

### ■ 현 정부, 건설산업의 긍정적인 효과 간과

- 대통령공약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손톱 밑 가시, 정부의 공공 조달 방향 등을 통해 제시된 현 정부의 건설업 정책 방향 및 주요 관심사는 주거 문제의 해소와 공정 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민주화와 불공정 거래의 개선에 맞춰져 있으며, 건설 물량의 측면에서는 일부 생활형 SOC나 도시 재생 등을 제외하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의 경기 악화 및 건설산업의 침체가 부동산 침체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 및 고용 효과가 간과되고 과소 평가됨.

\* 본고는 지난 4월 25일 EBN과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심포지엄 중 건설 부문 발제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임.

\*\* 토목, 건축의 수익성 자료는 한국신용평가가 자료를 보유한 30개 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건설업 전체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는 한국은행의 「2012년 기업 경영 분석(속보)」를 인용하였음.

■ 국토부 국정 실천 방안, IT 기술과의 융·복합 및 해외시장·중소/약자 중심 거래 관계 개선 제시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6대 국정 과제 실천 방안을 보면, 건설의 전 분야에 걸친 IT 기술 접목, 주력 시장 및 주력 분야의 변화 방향 등 제시
  - 전반적으로 ① 전통적 토건 사업→융·복합 사업, ② 국내 시장→해외 시장 확대, ③ Hard(시공) 중심→Soft(엔지니어링, 건설관리, IT 등) 중심, ④ 적정 가격의 확보 및 중소기업 중심의 거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건설 계약 제도 개선의 변화 방향 제시
  - 특히,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변화 방향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표방

■ SOC 투자 없이는 건설산업의 현안 해소 어려워...적극적 민간자본 유입 대책 필요

- 4.1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공공 건설 물량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 증대는 미미한 수준(추경 0.7조원)이며,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은 조사모삼(朝四暮三) 격에 불과
  -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 건설 지원이 물량 증대 및 영업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하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사업, 성장 거점 확보 관련 사업 및 방재 관련 사업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간 내 일감 부족 및 영업 현금 흐름 악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민간 사업자/정부/금융기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대안의 모색을 통해 민자 유치를 통한 SOC 투자 확대 필요

■ 경제 민주화는 발주자부터...건설산업 현황과 정책 간의 부조화 해소책 강구 필요

- 기술/가치 중심의 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현 건설업 상황을 볼 때 융·복합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시, 해외 시장 중심의 정책을 수용까지에는 장기간이 필요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공사 예정 가격 및 장기 계속 공사 등)가 여전히 존치. 경제 민주화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개선과 시정이 우선되어야 함.
  - 대다수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시공 위주의 사업 구조이며, IT 기술과의 접목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건설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건설 보증 : 국민 경제 및 건설업 활성화에 기여\*

- 전년 실질 보증 실적 1% 증가할 경우 실질GDP성장률 0.11~0.12% 상승 -

### ■ 건설 보증으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2배 이상 증가

- 2000년에 653.1억원 수준이던 건설 보증으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는 2010년에는 1,536.3억원 수준으로 10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 금융 위기로 인한 생산 유발 계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 보증의 공급 증가로 인하여 생산 파급 효과가 증가함.
  - 취업 유발 효과는 2000년의 1,361명에서 2007년에는 5,022명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금융 위기로 인하여 2010년에는 2000년 대비 소폭 증가한 2,108명 수준임.
  - 고용 유발 효과는 취업 유발 효과와 마찬가지로 2000년의 1,167명에서 2007년에는 4,411명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1,862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생산 파급 효과>

구분	2000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보증공급액(100만원)	10,659,032	14,475,287	20,429,223	30,459,476	32,569,146	43,238,565	37,325,896
생산파급효과(100만원)	65,308	102,659	96,140	298,290	153,694	182,294	153,633
취업유발효과(명)	1,361	1,916	1,598	5,022	2,204	2,582	2,108
고용유발효과(명)	1,167	1,675	1,426	4,411	1,932	2,254	1,862

주 : 산업연관표는 5년에 한 번씩 실적표가 나오며, 그 사이 기간은 간접 추정 방식으로 연장표가 작성됨. 2006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음.  
 자료 : 건설공제조합 각 연도 업무통계연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0~10년).

### ■ 전년 실질 건설 보증 실적 1% 증가할 경우 실질GDP성장률 0.11~0.12% 상승

-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 분석 결과, 경기 침체시 보증의 확대를 통해 정책 금융으로서 경기 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5월 2일에 발간한 「건설공제조합의 공익 가치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음.

\*\* VAR은 어느 특정 경제 이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제약 조건을 도출하는 모형으로 모든 변수를 내생 변수로 취급하여 다른 시계열과의 동태적인 상관 관계를 이용해 예측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모형에도 적합한 방법임.

\*\*\* 건설 보증은 자의적으로 물량을 증가할 수 없으나, 경기 침체시 정책적인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건설산업을 활용함에 따라 건설 공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건설 보증의 증가도 동시에 이루어짐. 한편, 건설 공사는 생산과 소비에 일정한 시차가 있고 생산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 보증을 필요로 함에 따라 건설 보증 없이는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경기 침체시에는 리스크의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보증은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함.

- 1분기 전 실질 건설 보증 실적이 실질GDP성장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실질 건설 보증 실적이 증가할 경우 실질GDP성장률이 상승함을 의미(계수 값 0.012)
- 거시경제 변수를 추가한 VAR 모형도 1분기 전 실질 보증 실적 1% 수준에서 실질 GDP성장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임(계수 값 0.011).

■ 전년 건설 보증 실적 1% 증가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가가치·매출·고용 모두 호전

- 건설 보증의 부가가치·매출·고용 탄력도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부가가치 탄력성 : 전년도 건설 보증 실적이 1% 증가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가가치는 0.0718~0.0964% 증가함.
  - 매출의 탄력성 : 전년도 건설 보증 실적이 1% 증가할 경우, 건설업체의 매출은 0.0563~0.1090% 증가함.
  - 고용의 탄력성 : 전년도 건설 보증 실적이 1% 증가할 경우, 고용은 0.0590~0.1508% 증가함.

<연도별 건설업체의 부가가치·매출·고용에 대한 건설 보증의 탄력성>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가가치(t값)	0.0964***	0.0435*	0.0283	0.0287	-0.0003
	(2.8629)	(1.8275)	(0.9483)	(1.3775)	(-0.0111)
매출(t값)	0.1090***	0.0720***	0.0270	0.0603***	0.0635***
	(4.5116)	(3.2889)	(1.4048)	(2.9042)	(2.7711)
고용(t값)	0.1143***	0.1508***	0.1158***	0.0924***	0.0804***
	(3.2395)	(4.8545)	(3.7444)	(3.1236)	(2.9121)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가가치(t값)	0.0052	0.0718**	-0.0332	0.0060	0.0820**
	(0.2072)	(2.4774)	(-1.0898)	(0.2230)	(2.5092)
매출(t값)	0.0601***	0.1007***	0.0563***	0.0828***	0.0978***
	(3.0610)	(4.3919)	(3.0087)	(4.4025)	(4.8158)
고용(t값)	0.0684**	0.0071	0.0590**	0.0002	-0.0029
	(2.4146)	(0.2504)	(2.2620)	(0.0064)	(-0.0976)

주 : \*, \*\*, \*\*\*는 각각 유의 수준 0.1%, 0.05%,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3	국토교통부	• 건설기준과 주최, '적정 공사비 확보 및 VE 제도 활성화 방안 개선 TF 5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실적 공사비 및 표준 품셈 개선 방안 세부 논의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공동 주택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 조정
5. 7	국방대학원	• '민간 투자 사업 러닝 액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
	국토교통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최, '골재 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심의 2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4대강 사업으로 하천 골재 채취가 금지되면서 골재 채취업자 등록 취소 등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 측 손해 배상 논의
5. 8	부천시청	• '정책 자문 관련 업무 협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공동 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안 자문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주최, '기업 규제 이의 신청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기업의 규제 이의 신청 및 정부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
5. 10	N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3년 부동산시장 전문가 워크숍'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4.1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시장 반응 및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등

■ 연구 분야 직원 모집

- 모집 부문 : 입찰 계약 제도 연구 분야
- 응시 자격 : 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 전공 : 경제학, 행정학, 법학 전공자 우대
- 채용 직급 : 연구원 또는 연구위원급
- 문의 및 참조 : 업무지원팀(Tel. 02-3441-0671), 홈페이지(www.cerik.re.kr) 공지 사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교육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3. 5. 28(화)~31(금),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업체 민간 투자 사업 실무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중소 건설업에 절실한 창조경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그런데 창조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현하겠다고 한다. 창조경제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창의적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는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건설 시설물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 등을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타 산업에 비해 높기로 정평이 났다. 이런 점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제격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역을 담당할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어려운 여건으로 뚜렷한 경영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사업규모는 계속 줄고, 적자 업체가 21%에 달한다. 출혈 수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량 중소기업마저 위협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지원제도가 건설업을 배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원 내용이 건설업과는 괴리가 커서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건설업체는 1~2%에 그친다. 또,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 중 국토부 예산은 전체 지원액의 0.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첫째,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 차별적인 지원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제조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건설업체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셋째, 중소 건설업을 지원할 총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 자문 및 교육 훈련, 지원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위해서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업역 간·지역 간 끝없는 갈등을 초래한 발주·입찰제도 중심의 제도적 보호에 계속 의존해서는 희망이 없다. 건설업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 건설업 지원정책의 창조적 모색이 절실하다. <한국일보, 2013. 4. 20>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